

# CEO Information

2006.4.5 (제547호)

##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 목차

- I. 혼란스러운 양극화 논의
- II. 양극화의 정의와 한국의 현상
- III. 양극화의 원인
- IV. 양극화의 해법

작성 : 민승규 수석연구원(3780-8155)  
serimsk@seri.org  
이갑수, 김근영, 손민중  
감수 : 정문건 연구위원(3780-8100)  
sericmk@seri.org

## 《 요약 》

양극화 현상과 관련된 논의가 분분하다. '양극화'가 본질적인 의미와는 관계없이 가계, 기업, 산업 등 각 부문의 성과격차 확대 현상을 설명하는데 통용되면서 사회적 논의의 초점이 분산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부문의 성과 격차가 결국 소득격차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는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득불균등과는 구분이 필요하다.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은 측정과 문제의식에 있어 다른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양극화 지수로 살펴본 한국의 양극화 현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세와 더불어 실질임금이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중산층이 축소되고, 하위 소득계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극화의 악화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후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던 양극화 지수는 2003년 이후 다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양극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득불균등을 나타내는 지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양극화 진전에는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에서 양극화는 고성장기에는 개선되고, 경기침체기에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내수가 침체되면서 70%가 넘는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불황에 빠져 양극화를 가중시켰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수출과 내수 간의 선순환고리가 약화되어,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었다. 노동시장의 경우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이 양극화 악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소득불균등 심화보다는 양극화 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소득이전을 통한 분배 개선보다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설한 유효수요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제도간의 정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끝으로 저소득 계층이 빈곤의 함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강화 등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 I. 혼란스러운 양극화 논의

### 양극화 문제의 본질과 배경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

#### □ 국가·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과 관련된 논의가 분분

- '양극화'가 본질적인 의미와는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분산되는 경향
  - 소득, 자산, 수출과 내수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등 각 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는 성과 격차가 양극화 현상으로 통용
- 기업, 산업, 노동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과 격차가 결국 소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는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

#### □ '소득양극화'의 개념을 '소득불균등'과 동일시하여 혼란이 가중

-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의 개념을 혼용
  - 소득양극화의 심화가 반드시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 필요

#### □ 양극화의 발생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

-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세계화·산업구조 고도화의 흐름 속에서 양극화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세계적 현상이라는 '不可避論'
- 한국경제가 지닌 구조적·제도적 특수성이 양극화를 필요 이상으로 심화시켰다는 '對應戰略失敗論'
  - 불균형 성장전략,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제도개혁 등이 주요인

## 양극화 논의에 대한 재점검과 실천적 대안 모색이 시급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대상의 우선 순위와 방향, 수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
  - 문제의 핵심을 소득양극화로 보느냐, 소득불균등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이
    - 전자의 경우에는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후자의 경우에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를 강조
  - 취약부문 대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방향과 수단'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
    - 경제·산업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문조차 지나치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최근에는 재원조달과 관련한 증세·감세논쟁이 심각한 이슈로 등장
  - 일부에서는 사회·경제 구조와 대응전략에 대한 검토와 반성은 간과한 채 사후 격차의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 대증요법보다 취약한 시스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
- 양극화와 관련된 사회적 통념을 재점검하고 문제의 핵심을 규명함으로써 실천 가능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급선무
  - 문제의 본질과 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분산된 논의를 통합하고 비생산적 논쟁을 종식시킬 필요
  -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을 마련

## II. 양극화의 정의와 한국의 현상

### 1. 소득양극화의 정의

□ 소득양극화(income polarization)는 ‘중간 소득계층(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에 밀집되는 현상’을 의미

- 중간층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양극화에 대한 진단에 차이
  - 본 보고서에서는 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양극화 진단 여부를 검증하였음
- 일반적으로 Wolfson지수<sup>1)</sup>나 ER(Esteban & Ray)지수<sup>2)</sup>를 사용하여 양극화 정도를 측정
  - 양자 모두 중간 소득계층의 축소 및 특정 부분으로의 밀집현상을 반영

□ 소득양극화가 곧 소득불균등 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양극화는 악화되었지만 소득불균등은 완화될 수 있으며, 역으로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었지만 소득불균등은 심화될 수 있음
  - ‘중산층의 감소’가 소득불균등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발생 가능
- 소득불균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sup>3)</sup>나 소득분배율<sup>4)</sup>로는 소득양극화 측정에 한계
  - 이들은 전체소득 평균에 대한 각 소득계층 간의 차이만을 반영하며, 특정 소득계층의 해체나 밀집도는 설명하지 못함

<sup>1)</sup> 중위소득과 타계층 소득간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지수로서, 중산층의 소멸정도를 나타냄 (M. C. Wolfson, "When Inequalities Diverg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1994)

<sup>2)</sup> 경제주체들의 선호체계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지수로서, 특정 소득계층으로의 소득이 집중되는 정도를 나타냄 (J. Duclos, J. Esteban, D. Ray, "Polarization: Concept,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Vol.72, 2004)

<sup>3)</sup> 지니계수는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반영하는 지수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소득분배를,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냄

<sup>4)</sup> 소득분배율은 모든 가계소득을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10등급 혹은 5등급으로 분류한 후 상위소득 20%의 소득합계에 대한 하위소득 40%의 소득합계의 비율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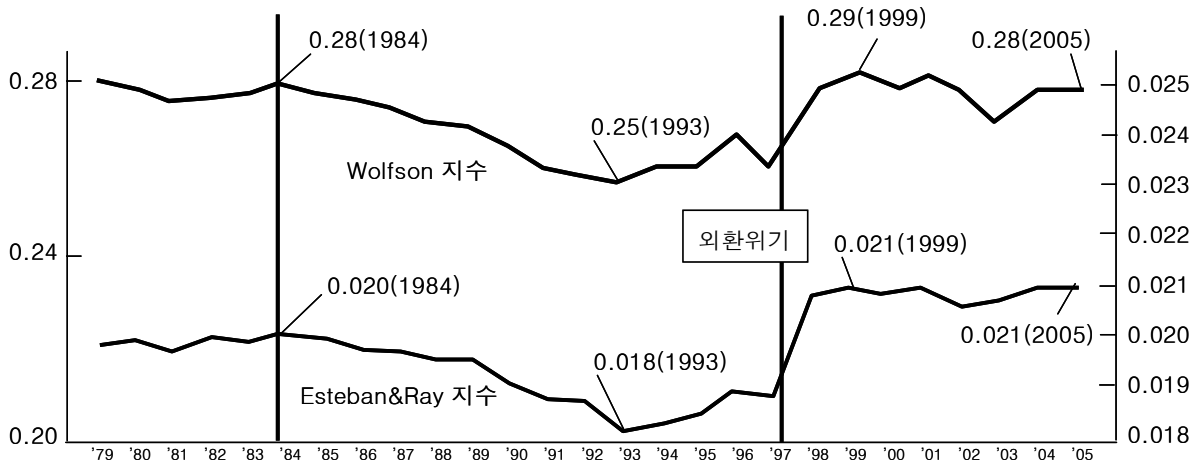
## 2. 한국의 현상

### 1980년대 중반이후 외환위기 전까지 양극화 지수는 하락세

□ 198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10여 년간 한국의 양극화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1993년 Wolfson지수와 ER지수는 각각 0.25와 0.018로 최저치를 기록
- 1984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양극화 지수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

한국의 양극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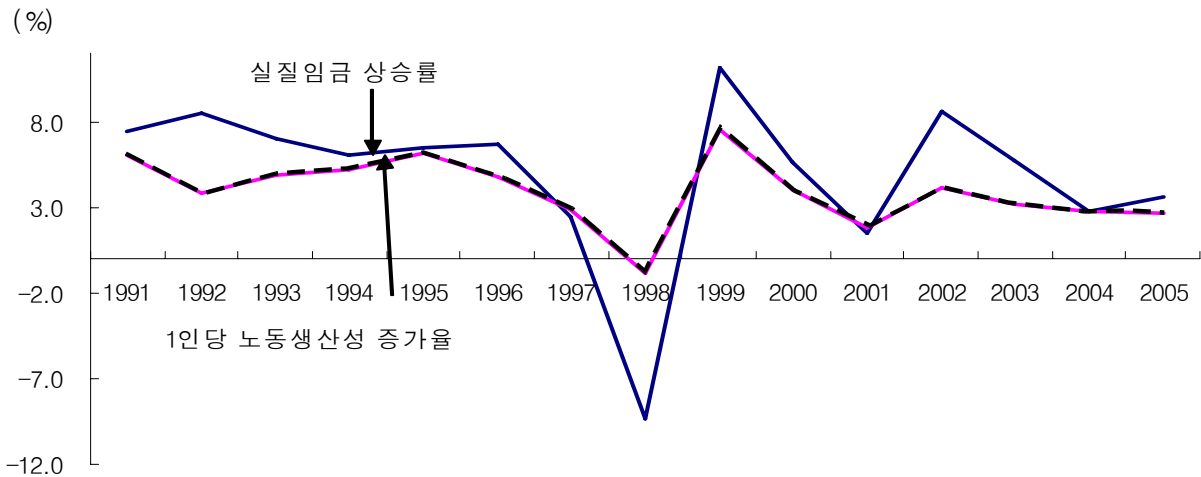
주: 소득은 소득 10분위별 도시근로자 소득을 기준

□ 1980년대 중반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양극화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높은 경제성장세와 임금상승률 때문

- 양극화 지수가 낮은 수준을 보인 1984~1997년간 한국경제는 부분적인 등락은 있었지만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
- 평균 GDP 성장률(%): 5.9('79~'83) → 8.1('84~'97) → 4.2('98~'05)
- 동시기에 발생한 실질임금의 상승도 양극화 해소에 일조

-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격화되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추세가 1991~1996년까지 6년간 지속<sup>5)</sup>
- 1993년 이후 양극화지수의 하락이 지속되지 않은 데에는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도 원인으로 작용

###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상승률 비교



주: 실질임금의 경우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준이며, 노동생산성의 경우 실질 GDP를 전체 취업자 수로 나눈 수치

자료: 통계청 KOSIS DB 및 한국은행 ECOS DB에 의거 작성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급속히 진전

□ 한국의 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라는 외부 충격에 의하여 악화

- 외환위기를 경계로 하여 양극화 지수가 급작스럽게 상승
  - Wolfson지수: 0.26('97)→ 0.28('98)→ 0.29('99)
  - ER지수: 0.019('97)→ 0.021('98)→ 0.02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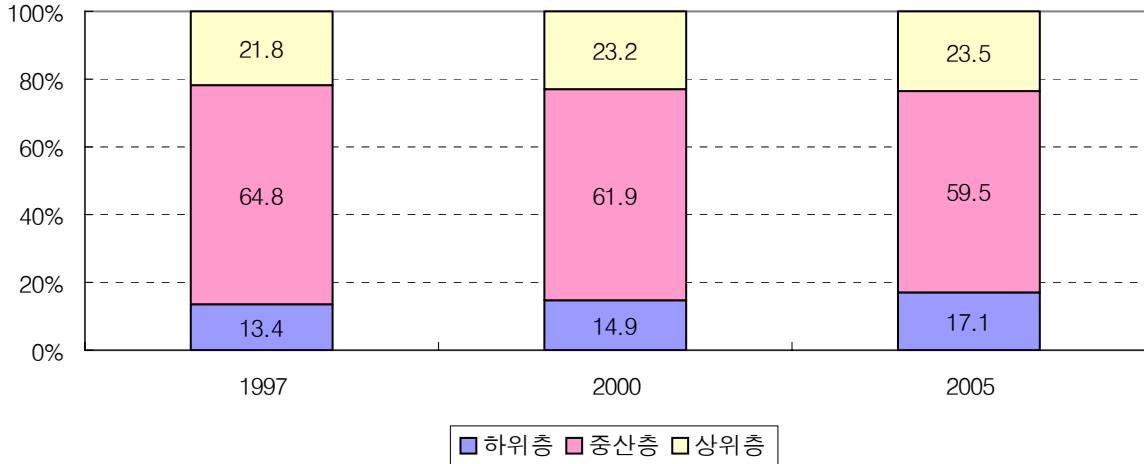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감소하고 하위 소득계층의 비중도 증가

- 1997년 이후 8년간 중산층 비율이 5.3%p 감소한 반면, 하위층은 3.7%p, 상위층은 1.7%p 증가

<sup>5)</sup> 노동부의 실질임금 지수 발표는 1990년부터 시작됨

-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174.7만 명인데 비해 상위층으로 진입한 인구는 94.5만 명<sup>6)</sup>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 외환위기 직후 상승한 양극화 지수는 2001년 이후 2년간 소폭 하락하거나 현상을 유지
  - 동기간 중 Wolfson지수는 하락하고, ER지수는 현상 유지
    - Wolfson 지수: 0.291('01) → 0.284('02) → 0.274('03)
  - 이는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중산층 감소세가 다소나마 완화되었거나, 중산층의 복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 실업자 수 추이: 89.9만명('01) → 75.2만명('02) → 81.8만명('03)
- 2003년 이후 양극화지수가 다시 상승하면서 양극화 문제가 이슈로 등장
  - Wolfson지수는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ER지수는 이보다 빠른 2002년 이후 상승 추세 지속
    - 이는 내수 성장세 둔화로 인한 중산층 감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

<sup>6)</sup> 가구원이 일정하고 추계인구 평균을 전체인구로 간주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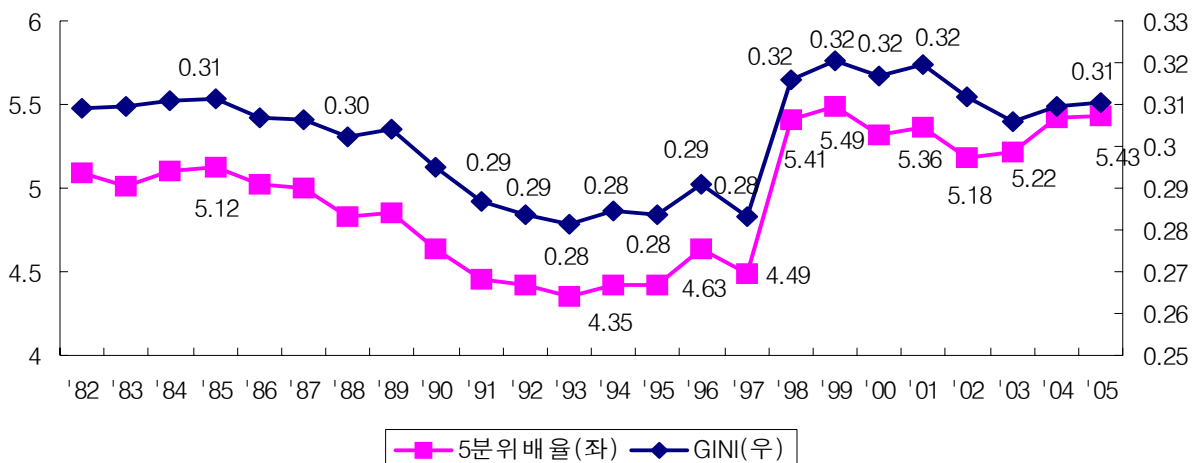


## 양극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등 정도는 양호한 수준

□ 소득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악화

-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1999년에 1982년 이후 최고치인 5.49 기록
- 지니계수도 1998년 0.32를 기록하여 전년(1997년)대비 0.04p 상승
- 소득불균등도가 크게 개선되었던 90년대 초반에 비하면 악화되었으나 절대수준은 80년대 초반 수준과 유사

최근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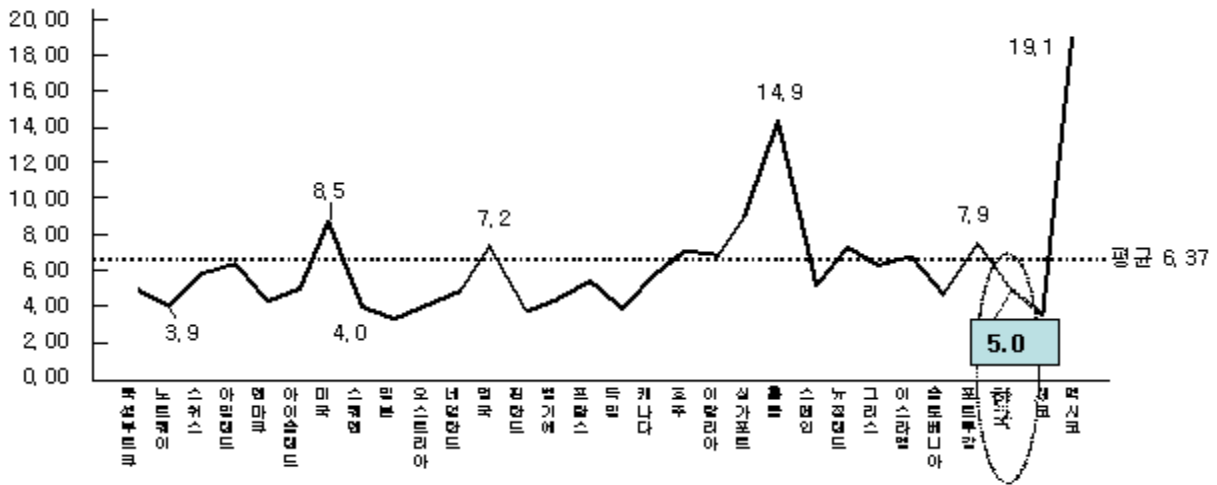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DB에 의거 작성

□ 그러나 국별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소득불균등도는 아직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

- 한국의 소득 5분위배율은 5.03으로 국민소득 상위 30개국 평균인 6.37을 하회
- 한국의 수치는 미국(8.5)를 하회하나 일본(3.4) 및 북유럽 수치(스웨덴: 4.0, 노르웨이: 3.9, 덴마크 4.3)는 상회
-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은 세계 28위이나 소득불균등도는 13위

각국의 1인당 소득순위와 소득불균등도 비교(2004년 기준)



주: X축은 1인당 국민소득 1위인 룩셈부르크부터 30위인 멕시코까지를 순서대로 나열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2005

### III. 양극화의 원인

□ 양극화 원인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을 위한 실증분석<sup>7)</sup> 결과 성장률 저하, 수출·내수 간 차이 등 '경기 요인'과 '노동시장' 변수가 핵심인 것으로 판명

- 경제성장률 저하는 즉시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 변동성의 심화 역시 양극화 지수의 악화로 연결
  - 경기변동 심화는 상대적으로 유동자산 등을 통한 방어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
  - 내수의 성장률 하락, 수출-내수 간 격차 확대도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장 변수 중 양극화와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임시직 비율 등 비정규직 항목과 자영업자 비율로 나타남
  - 특히 임시직 비율과 양극화 지수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

<sup>7)</sup> 양극화와 상관성이 높은 변수를 중심으로 양극화 설명모형을 구성하여 양극화 지수와 설명요인 간의 체계적 관계를 규명. 모형 추정결과, 양극화 지수와 성장률, 수출내수 gap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양극화 결정요인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기여도를 판정해 본 결과 노동시장 변수들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상세한 내용은 2006년 4월 중순에 발표 예정인 “양극화, 그 발전적 해법의 모색”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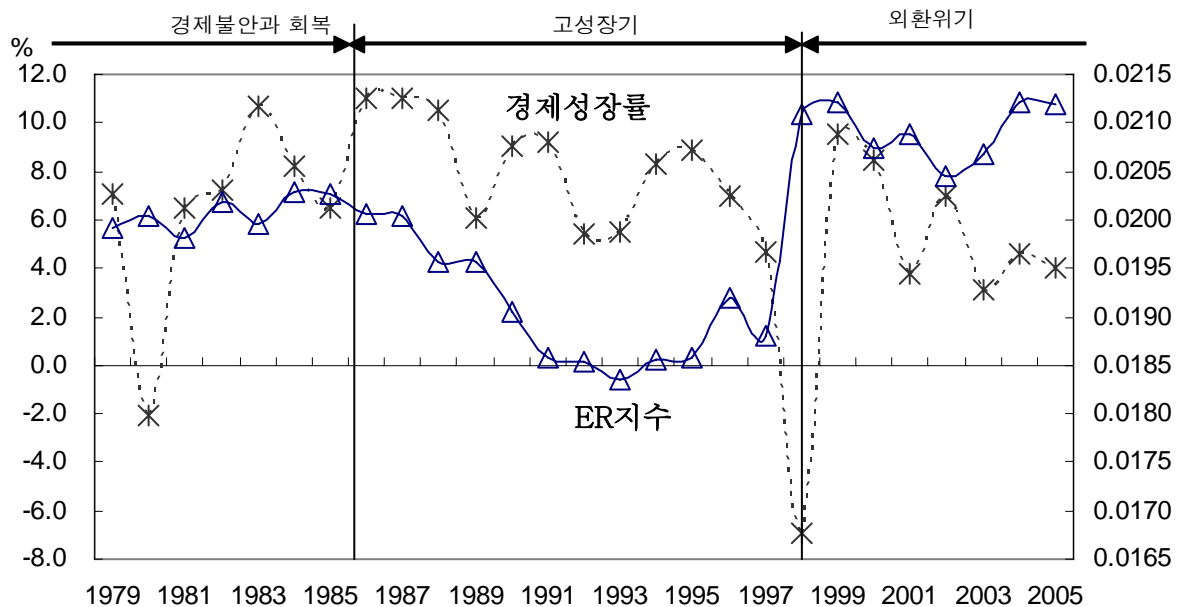
## 1. 저성장과 내수침체가 양극화의 주요인

### 경제성장률 하락이 양극화 악화를 유발

□ 한국경제에서 양극화는 고성장기에는 개선되고 경기침체기에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

- 1980년대 중반까지는 오일쇼크 등 경제불안과 함께 양극화 현상이 확대
  - 양극화지수인 ER지수는 1979년 0.0199에서 1985년 0.0203으로 상승
- 1980년대 중반 이후 고성장과 더불어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양극화 문제가 점차 개선
  - ER지수는 1985년(0.0203)을 정점으로 1997년에는 0.0188로 하락

한국경제의 성장률과 양극화지수(ER지수) 추이



□ 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논의에 있어 성장-분배 논란은 무의미하며, '잠재 성장력의 복원'이 양극화 개선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시사

-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쇼크에 의해 성장률이 급전직하하자 양극화 지수도 급상승
- 그 이후 1990년대 초중반의 양극화 수준은 물론이고 아직 1980년대 수준으로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내수침체가 양극화를 가중

□ 한국경제는 내수가 악화되면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sup>8)</sup>

- 내수부문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방화의 진전 등으로 1990년대의 76.1%에서 2005년 현재 45.9%로 하락<sup>9)</sup>
- 그러나 경제 내 종사자 비중과 사업체 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내수 성장률과 양극화 간의 상관관계는 보다 높아짐

### 서비스업 종사자 및 사업체 수 비중

(%)

	1980년대 평균	1990년대 평균	2000년대 평균	2005년
종사자 수 비중	48.4	63.2	71.5	73.5
	1993년	1996년	2000년	2004년
사업체 수 비중	84.9	85.7	86.9	86.5

자료: 통계청, KOTIS DB에 의거 작성

□ 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 급증과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급증이 소비부진의 단초로 작용

<sup>8)</sup> 계량분석의 결과, 내수가 1% 상승할 경우 양극화 지수는 0.19%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

<sup>9)</sup> 이 때 내수는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자본형성의 합에서 재화와 용역의 수입 분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

-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무차별적으로 발급하여 신용불량자가 양산
  -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제도, 개인채무회생제도 등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2005년말 기준으로 297만명 수준
-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역시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유발하여 소비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
- 가계신용총액은 267조원(2000년)에서 521조원(2005년)로 급증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부채상환액 비율 추이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가계 부채 비율	한국	85.1	89.0	97.7	84.7	87.4	93.9	109.0	131.0	131.2	131.8
	G7 평균	101.7	102.4	103.7	106.1	108.5	109.2	111.5	113.3	117.1	-
부채상환액비율		13.1	12.0	13.8	17.1	16.9	16.2	19.5	19.5	23.9	23.4

주: G7 평균은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평균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각호 및 한국은행, 통계청 DB

### 수출·내수 간 선순환 고리 약화

□ 대기업 구조조정, 기업 리스크 증대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가 약화

- '수출 증대 → 투자·고용 증대 → 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
- 외환위기 이전에는 1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밀접했던 수출·내수 간 상관관계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약화
  - 외환위기 이후 수출은 연평균 11.6% 증가한 반면, 내수는 -0.02% 감소

## 외환위기 전후 경제성장과 내·외수 증가율 추이

(%, 연평균 증가율)

	1970~1997년	1998~2005년	전 기간
실질 경제성장률	7.8	5.8	6.9
수출증가율(통관기준)	20.8	11.6	18.1
내수증가율	6.7	-0.02	4.8
수출-내수 상관관계	0.98	-0.36	0.86

□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추세가 고착화되는 경향

- 전반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한 가운데, 수출 구조가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IT산업 위주로 재편된 데에 기인
  -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계수 : 0.70('95) → 0.63('00) → 0.58('03)
  -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명/10억원) : 46.3('90) → 25.8('95) → 15.7('00)<sup>10)</sup>

## 2. 노동시장의 변화도 양극화 악화에 영향

□ 노동 유연성 확보와 임금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활용이 확산

- 임금근로자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급속히 증가
  - 2005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6.6%로 2001년에 비해 9.8%p 증가

## 임금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임금 근로자(천명)	13,540	14,030	14,149	14,584	14,968
비정규직(천명)	3,635	3,839	4,606	5,394	5,483
비율(%)	26.8	27.4	32.6	37.0	36.6

자료: 노동부, "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분석", 2005.12.9

<sup>10)</sup> 재정경제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6. 3

□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근무

- 중소기업은 취약한 경쟁력과 낮은 지불능력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고용
- 300인 이상 사업체는 비정규직 비율이 19.7%에 불과하지만, 1~4인 사업체는 50.4%나 차지
  - 도소매업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324만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59%에 달함<sup>11)</sup>

□ 기업·금융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들이 자영업에 과다 진입하여 자영업자 간에 과당 경쟁 유발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됨에 따라 자영업 창업이 증가
  - 자영업자 수(농업 제외) : 약 420만명('98) → 약 500만명('04)<sup>12)</sup>
  -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27.1%, '04)은 선진국 대비 과다<sup>13)</sup>  
(미국 7.3%, 일본 10.8%, 독일 10.1%, 대만 16%)
- 내수 위주의 서비스업 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간 과당경쟁 초래
  - 실질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비중이 1998년 33.8%에서 2003년에는 41.2%로 급증했다는 조사결과도 제시<sup>14)</sup>

<sup>11)</sup> 노동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분석", 2005. 12

<sup>12)</sup> 재정경제부, "경제양극화와 정책과제", 2005. 6. 3

<sup>13)</sup> 전계서

<sup>14)</sup>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 자영업자 700여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한국노동연구원,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분석", 『노동리뷰』, 2005. 2)

## IV. 양극화의 해법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

-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중산층 복원이 가능
  - 한국의 소득양극화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극심한 경기침체와 성장률 저하로 인해 촉발
    -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논쟁 속에서 표류한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도 잃어버리고 양극화 추세도 심화
  - 소득불균등 수준보다는 양극화 지수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므로,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중산층 복원'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
    - 현 양극화 추세를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점과제 및 보완과제





## 중점과제 :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 창출

### □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

- ‘중산층’의 하위계층으로의 탈락을 방지하고, 중산층을 확대하는데 초점
- 성장잠재력과 고용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
  - 비즈니스 서비스와 문화·관광 등 소프트웨어 산업 및 다양한 IT 신규시장 형성 등

### □ 성장 친화적 정책을 통해 '중산층의 경제심리'를 안정시켜 소비를 진작

- 성장과 분배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 속에서 함께 추구하여야 할 과제
- 대중영합적인 분배정책이나 인위적인 평등화 정책은 소모적인 분배관련 지출만 확대시키며, 이는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 최근 내수부진의 원인

- ▶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심리 위축
- ▶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미래 불안을 심화
- ▶ 소비여력 축소로 소비에 쓸 여유자금 부족
- ▶ 취약한 서비스부문도 내수 진작의 활로를 차단

### □ 기업들이 투자와 창업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

- 소위 ‘가진 자’에 대한 반목과 이에 편승한 제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을 저해하고, 분배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도 저해

- 대기업, 상위소득 계층 등 경제시스템 내 ‘승자(winner)’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반감을 불식
- 그러나 경제시스템의 ‘승자’가 공정한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되도록 정부의 감시기능은 강화

## 보완과제 1 : 제도적 정합성 강화

- 건실한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적 정합성 확보 노력이 필요
  - 제도간 상호 정합성이 맞지 않을 경우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악화
  - 국가활력 제고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제도 구축
  - 특정 부문의 현안 해결을 중시하는 부문 최적화 논리에서 탈피하여 전체 최적화를 지향하는 넓은 시각을 적용
  - 노동, 금융제도 및 기업지배구조 등이 상호보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

### 외환위기 이후 제도 간 정합성

- ▶ 외환위기 이후 평생고용의 가능성과 관계금융의 전통이 깨어진 반면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주식시장의 미성숙으로 시장기능 마비현상이 반복
- ▶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일본의 기업들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즉각적인 고용 구조조정보다는 차입금을 늘리는 관계금융을 통해 해소

-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시장중심적 개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ALMP)을 동시추진
  - 저소득층 근로자의 빈곤화가 소득양극화의 원인인 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노동이동과 근로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
  - 548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대(전체 근로자의 36.6%)가 소득양극화에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

###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의 조합이 스웨덴 저소득층 보호와 원활한 계층 간 이동성을 동시에 구현
- ▶ 고용과 산업구조 고도화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轉業을 지원
  - 저생산성 산업부문의 축소에 의해 양산되는 잉여 근로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생산성 산업부문으로 이동을 촉진

## 보완과제 2 : 동등한 기회의 보장

-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가 유용한 수단
  - 현실적으로 교육 투자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자녀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계층 이동 가능성(social mobility) 제고
    - 공교육의 질적 개선이 급선무
  - 저소득층이 교육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정책

- ▶ 미국의 경우 개인의 능력차이가 소득불균등을 야기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것에 주력
  - 1964년 對빈곤전쟁(War on Poverty)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소외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Head Start 프로그램’이 대표적
  - 2002년 부시 행정부는 NCLB(No Child Left Behind)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광범위한 교육개혁을 실시

---

□ 경제 활력 유지와 병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 추진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親성장적 소득이전 규모 확대
  
- 경제주체의 투자, 근로 의욕의 저하를 방지하는 재원확보 대책 필요
  - 조세위주의 재분배 노력은 조세부담 회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 초래
  -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보다는 탈루된 기존 세원의 적극적 확보를 통한 세수증대 필요

##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lt; 금융동향 &gt;

	3. 28.	3. 29.	3. 30.	3. 31.	4. 03.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976.8	975.2	976.1	971.6	970.8
	엔/달러(뉴욕시장)	116.63	117.87	117.75	117.33	117.76
금리	회사채(3년AA-, %)	5.23	5.21	5.22	5.25	5.29
	국고채(3년, %)	4.90	4.88	4.89	4.93	4.98
주가지수(KOSPI, 증가)	1,331.31	1,332.72	1,338.14	1,359.60	1,379.75	

## &lt; 실물동향 &gt;

(전년동기(월)비, %)

	2004년	2005년	11월	12월	2006.1월	2월	3월
GDP성장률 <sup>1)</sup>	4.7	4.0	5.3	..	..	..	..
민간소비	-0.3	3.2	4.2	..	..	..	..
설비투자	3.8	5.1	10.2	..	..	..	..
산업생산 증가율	10.2	6.3	11.8	11.3	6.4	20.0	..
평균가동률	80.4	79.8	82.1	79.4	83.5	80.7	..
실업률	3.7	3.7	3.3	3.5	3.7	4.1	..
실업자(만명)	86.0	88.7	78.5	82.7	86.9	95.3	..
전국 어음부도율	0.06	0.04	0.03	0.02	0.02	0.02	..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2.7	2.4	2.6	2.8	2.3	2.0
수출(억달러, FOB) <sup>2)</sup>	2,538.5	2,844.2	258.3	256.3	232.7	238.3	270.4
(증감률)	(31.0)	(12.0)	(11.9)	(10.5)	(3.6)	(16.8)	(12.9)
수입(억달러, CIF)	2,244.6	2,612.4	238.5	241.9	228.2	234.1	257.5
(증감률)	(25.5)	(16.4)	(17.4)	(15.4)	(17.3)	(27.2)	(13.0)
경상수지(억달러)	281.7	165.6	22.0	5.4	0.9	-7.6	..
외환보유액(억달러)	1,990.7	2,103.9	2,082.3	2,103.9	2,169.3	2,159.5	2,173.4
총대외지불부담 <sup>3)</sup> (억달러)	1,723	1,900	1,900	..	..	..	..

1) 한국은행 3월 22일자 '2005년 국민계정(잠정)' 보도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